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조국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4899 |
|----------|------|

발의연월일 : 2024. 10. 24.

발 의 자 : 조 국 · 서왕진 · 정춘생
이해민 · 김준형 · 황운하
차규근 · 신장식 · 김선민
김재원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인 독도와 동해의 경우, 일본의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 및 동해 명칭 표기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표기를 알리고,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이처럼 국가 차원의 외교적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국제적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외교활동 등 종합적인 대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및 제반 외교활동 수행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틀을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및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필요한 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2조).
- 다. 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하여 국제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 라.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마.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및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바. 외교부장관은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을 통해 세계 각 국가 및 국제기구의 독도 및 동해의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표기에 잘못이 있음을 파악하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국가 및 국제기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8조).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안 제9조).

아.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

자.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함(안 제11조).

차. 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와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3조).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과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필요한 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략과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외교활동) ① 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하여 국제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하여 국제규범 논의

에 적극 참여하고 타 참여국, 국제기구 및 국내외 민간단체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영토주권 수호 기본계획의 수립) ①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2.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국제법적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 관련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4.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관련 지도·자료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독도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6.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③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확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 ① 기본계획 심의 등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독도 및 동해의 표기 현황 파악 등) ① 외교부장관은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과 유관기관을 통하여 세계 각 국가 및 국제기구의 독도 및 동해의 표기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의 장은 독도 및 동해의 표기 현황을 파악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도 및 동해에 관한 표기에 잘못이 있음을 파악하면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국가 및 국제기구에 정정·말소 등의 시정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독도 및 동해 영토주권의 교육 및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 활동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국제협력)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제적 차원의 독도 및 동해의 조사·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
2. 국제사회에서 독도 및 동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
3. 국제회의·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참가
4.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독도의 날 지정) ①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도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국고지원)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연차보고) ① 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와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확정에 관한 경과조치) 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여야 한다.